

제도 적용 시점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1면에서 계속 →

학교가 도입하려는 방식은 사전 수강신청 단계에서 일부 인원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자리는 기존처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혼합형 제도다. 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라면 해당 강좌를 담은 학생 전원의 수강이 확정된다. 정원을 초과한 강좌는 수강정원의 30%만 우선 확정된다. 30%를 확정할 때 전공과 교양 강좌는 마일리지 입력량을 1순위로 삼는다. 마일리지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배분인수 강좌는 해당 분야 미이수자를 먼저 배정한 뒤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70%의 수강신청 잔여석은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 기존처럼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타전공 과목도 기존과 동일하게 학년별 수강신청 이후 진행되는 전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회과담의 역할은 ‘예비과목담기’가 일부 이어받는다. 예비과목담기 대상

은 타전공 강좌나 재수강 강좌처럼 사전 수강신청 단계에서 신청할 수 없는 과목들이다.

태 팀장은 “선착순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선착순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며 “30% 우선 확정 비율은 학생 선호도 반영과 기존 본 수강신청 기회 보장 사이에서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공 · 교양 마일리지 분리 최대 입력도 제한

마일리지는 본인의 선호도와 필요도를 반영해 희망과목에 입력할 수 있는 포인트다. 학생은 회과담 단계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해당 강좌에 원하는 만큼 배정한다. 마일리지는 전공과 교양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공 마일리지는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10을 곱한 만큼 부여되고, 교양 마일리지는 200점이 부

| 바뀐 수강신청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기존 수강신청	개편안
수강 확정 방식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선착순 신청	사전 수강신청에서 일부 우선 확정 후, 기존 방식으로 직접 선착순 신청
희망과목담기	수강 수요 예측과 신청 편의를 위한 기능 실제 수강신청은 아님	사전 수강신청 기능 추가(마일리지 분배를 통한 우선 확정 가능)
정원 이내 강좌	회과담 인원이 정원 이내여도 자동 확정되지 않음	전원 수강 확정
정원 초과 강좌	-	정원의 30%는 마일리지 기준으로 우선 확정
남은 정원	-	나머지 70%는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 기존처럼 신청
학년별 수강신청	본인 학년에 소속 전공·교양 과목 신청	학년별 수강신청은 유지하되, 사전 확정 후 남은 70% 여석 신청
타전공·재수강	전학년 수강신청 또는 정정 기간에 신청 가능	예비과목담기에 담은 뒤 기존 방식(전학년·정정 기간)으로 신청
마일리지	X	전공·교양 마일리지로 사전 확정 우선순위 결정
핵심 변화	회과담 후 별도 수강신청 필요	정원 이내 강좌와 일부 정원 초과 강좌를 사전 단계에서 확정

여된다. 두 영역의 마일리지는 서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학점에는 마일리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은 재학생으로, 마일리지 없는 휴학생은 예비과목 담기만 가능하다.

강좌당 입력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도 제한이 있다. 전공 강좌에는 최대 75마일리지, 교양 강좌에는 최대 100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는 과목은 전공과 교양 각 1과목씩

으로 제한된다. 또한 강좌에 별도로 배정하지 않아도 기본 1마일리지가 자동 배정된다. 수강신청 시에는 본인 학년에 배정된 수강정원과 해당 강좌를 담은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생 불이익 가능성 “보완책 마련하겠다”

일부 학생의 불이익 가능성은 여전히 쟁점이다. 특히 마일리지 부여 대상이 재학생으로 한정될 경우, 군

휴학생은 복학 절차와 시점에 따라 사전 수강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 4학년 2학기 학생도 특정 전공 필수 과목이나 졸업요건 충족 과목을 듣지 못할 경우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이들에게 수강신청 실패는 졸업 시점과 직결되는 문제다.

학사지원팀은 군휴학생과 4학년 2학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자료를 통해 개편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타대학에서도 선착순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다. 연세대는 학생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를 과목별로 분배하게 한 뒤 마일리지와 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자를 배정한다. 한국외대는 정원 내 자동확정 방식의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수강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면 자동 확정하고, 초과한 강좌는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우리학교 개편안은 연세대처럼 학생 선호도를 마일리지로 반영하면서도, 한국외대처럼 사전 단계에서 일부 과목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여석은 본 수강신청으로 넘기는 혼합형에 가깝다.

1면에서 계속 →

강의실과 ‘융합실험실’ 마련 ‘로봇 친화’ 시스템 구축도

분관은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강의실 5개와 대형 세미나실, 그리고 여러 전공이 함께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실험공간인 ‘융합실험실’이 들어선다. 융합실험실은 해외 대학의 융합연구 공간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구성원들은 유리벽을 통해 연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2층은 강의실 5개와 소형 세미나실, 약 200명 내외를 수용 가능한 다목적 대강당으로 구성된다. 강의실은 총 10개로 각각 3~40명 규모이며, 일부 강의실은 내부 칸막이벽을 유연하게 조정해 두 개의 공간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큰 공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층과 2층은 두 개 층 높이의 열린 ‘융합 라운지’로 연결될 예정이다. 계단형 휴게 공간과 소규모 세미나 공간, 열린 갤러리가 배치된다. 꼭대기층인 3층에는 ‘파빌리온 공간’이 조성된다. 해당 공간은 카페테리아로 활용하거나 다목적 대강당에서 행사가 열린 이후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관 건립에는 총 약 16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교비 80억 원과



공과대학 분관 3D 조감도.

(사진=김동일 교수 제공)

기부금 5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황경은(건축학) 교수가 ‘스마트+빌딩’ 로봇 친화 건물 국가 과제에서 수주한 약 30억 원의 국비가 더해졌다. 이 중 약 10억 원은 로봇 친화 건축에, 약 20억 원은 로봇 운영 센터 구축과 로봇 도입에 쓰인다. 공과대학 최진환(기계공학) 학장은 “추가된 예산은 로봇 이동을 위한 인프라와 로봇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핵심은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로봇이 사람의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관의 모든 실에는 문턱을 없애 무단차 설계가 적용됐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이 단차에 걸리지 않고 건물 전체를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로봇은 무선 신호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람과 함께 탑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완공 후 분관에는 ▲공용 공간과 복도를 관리하는 청소 로봇 ▲화재·안전·보안 상황을 감지하는 방재·보안 로봇 ▲실험 장비 등 무거운 물품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

로봇이 상시 배치될 계획이다.

‘원자력 교육센터’ 증축 노후화된 시설 손본다

한편 ‘원자력 교육센터’ 증축 역시 분관과 함께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시공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학교 원자력공학과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실습은 물론 타 대학 학생들의 교육 수요까지 감당해왔다. 그러나 기존 실습·교육 공간이 협소하

고 낙후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교비 20억 원이 투입돼 총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운영 사무실이, 2·3층에는 전용 강의실이 들어서게 된다. 원자력 교육센터는 분관보다 약 6개월 빠른 2027년 여름 완공돼 2027년 2학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최 학장은 “분관과 원자력 교육센터, 두 건물이 연구 중심 공과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